

경제투표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박선경 | 인천대학교*

| 국문요약 |

한국 선거에서 경제투표는 왜 잘 발견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교 국가사례로서의 이론적 보편성과 한국정치적 맥락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투표이론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정당정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정당의 지지기반이 약한 편이다. 이런 정당 지지기반의 취약성이 경제투표적용을 제한할 이론적 가능성을 논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지 정당 여부와 경제투표 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경험 분석 결과, 지지 정당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를 하는 반면, 무당파일수록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를 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한국의 세대정치이론을 경제투표에 적용하여, 20~30대 청년세대가 장년층과 달리,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집권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경제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설들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취약계층이 경제투표를 할 가능성과 지역주의가 경제투표작동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보았으나, 이러한 가설들을 지지할 경험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 경제투표,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 한국정치적 맥락, 정당 지지기반의 취약성, 무당파, 세대정치.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skpark@inu.ac.kr).

I. 서론

한국 유권자는 경제투표를 하는가? 경제실적이 좋으면 집권당에 투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에 투표한다는 경제투표이론의 기본적인 논리가 한국정치에서 작동하지 않을 특별한 이론적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투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한국 선거에서 경제투표가 매 선거에서 꾸준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객관적 경제지표와 투표 간 관계를 분석한 문우진(2018)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총 19번의 선거에서 객관적 경제지표와 집권당 후보에 대한 득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경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독립변수로 본 연구들 역시 경제투표의 작동에 대해 유보적이다. 기존 연구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의 선거에서 경제투표는 거의 발견되지 않다가(김재한 1993; 박경산 1993), 경제위기 이후 경제문제가 주요 선거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징후적 현상이 포착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주의 투표행태나 세대갈등 등 다른 주요 투표결정요인에 비해 부차적인 영향력만 가지고 있거나(김성연 2016; 이현우 1998; Kang 2013),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부 선거에서만 경제투표 현상이 관찰된다(강우진 2013; 이내영 · 안종기 2013; 이재철 2008; 황아란 2000).

본 연구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한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사례로 한 다수의 연구들이 공히 경제투표를 강력하고 안정적인 투표 기제 중 하나로 꼽는 것과 달리(Duch 2008; Lewis-Beck and Stegmaier 2007; 2008), 왜 한국 선거에서 경제투표 현상은 부차적이거나 일회적인 투표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가? 민주화 이후 선거 횟수가 적어서라고 단순히 답할 수 없는데, 더 짧은 시간의 선거에서 경제투표현상을 강하게 발견하는 연구도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투표이론의 고전 중 하나인 터프트(Tufte 1978)의 연구는 1946년부터 1974년 사이 일 정당 실질가처분소득과 중간선거에서의 여당 득표율 간 양의 상관관계를 확

인했었다. 한국이 민주화 이후 총 6번의 대통령 선거, 8번의 국회의원 선거, 7번의 지방선거가 있었으므로 선거 횟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다. 즉, 한국 선거에 경제투표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한국적 맥락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투표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한국적 맥락이란 과연 무엇인가? 본 연구가 정의하는 한국적 맥락은 크게 비교국가사례로서의 한국의 이론적 보편성과 한국정치 이론적 특수성으로 구분된다. 비교국가사례로서 한국은 민주적 선거와 정당정치의 경험이 짧은 신생민주국가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후발산업국가이면서도 경제위기 이후 급속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시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정치의 이론적 특수성으로는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대민주주의의 갈등 구조가 지역주의 갈등구조로 대치된 것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지역주의 구도가 약해진 대신 세대갈등이나 이념갈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은 경제투표이론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이러한 맥락들이 한국에서 경제투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투표에 대한 한국적 적용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첫째, 정당정치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정당지지 기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제투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후발산업국가이며, 국제경제환경에 민감한 개방경제이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등 급속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했던 국가이다. 이런 특징이 경제투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까?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경제문제를 근거로 집권당을 처벌 혹은 지지할 확률이 높을까? 셋째, 기존연구에서 언급하듯이 지역주의가 경제투표현상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일까? 지역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권자들일수록 경제투표를 할 확률이 높을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가설은 최근 부각되는 세대

간 정치성향의 차이이다.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경제문제를 기준으로 집권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을까 혹은 세대와 경제투표는 전혀 무관할 것인가?

이러한 네 가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후 2장에서 각각의 질문을 이론적으로 논증한 후, 3장에서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²⁾ 4장에서 향후 더 논의되어야 할 연구과제들을 중심으로 결론을 지을 것이다.

II. 경제투표이론의 한국적 적용

1. 정당정치 역사가 짧아서 경제투표가 작동하지 않는가?

비교국가사례로서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지만 정당정치의 역사가 짧은 신생민주국이다. 이런 특징은 경제투표의 작동과 관련한 두 가지 논점을 제공한다. 첫째, 안정적인 정당지지기반세력의 부재이다. 신생민주국가들의 경제투표 현상을 연구한 논문들을 정리한 루이스백과 스테그메이어(Lewis-Beck and Stegmaier 2008, 304)의 지적처럼 신생민주국가들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와 정당정치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당지지에 대한 뿌리가 깊지 않다.

약한 정당지지는 경제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론적으로는 약한 정당지지기반이 경제투표현상을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할 수도 있다. 우선, 정당의

2) 비교국가사례로서 한국의 이론적 보편성을 논하는 2장의 내용이 향후 3장의 경험적 분석으로 이어지면서 분석단위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한 논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이론적 보편성을 추론해내기 위한 논리전개는 국가가 분석단위이지만, 실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국가비교가 아니라 한국의 여론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논리적 오류는 본 연구의 한계로 감안해야 할 지점이며, 향후 별도의 연구로 국가비교를 통한 경험적 검증을 시행해서 본 연구의 논리적 오류를 줄이고자 한다.

지지기반이 약할수록 경제투표기제가 잘 작동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선거시기마다 가변적인 이슈나 상황에 따라 투표할 확률이 높고, 이런 가변적 이슈 중 국가적 혹은 개인적 경제상황은 다른 정책이슈에 비해 중요한 투표결정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당의 경제실책이나 경제실적은 다른 정책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찰하기 쉽고 유권자가 판단하기 쉬운 이슈이기 때문이다. 실제 송진미·박원호(2014)의 연구가 무당파에게 경제성장이슈가 중요한 투표결정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 이유가 공고한 유권자의 경우, 지지정당의 경제실책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를 제외한 다른 정책이나 이념적 지지사유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지지정당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에서 정당지지세력을 안정적으로 형성한 유권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경제투표현상은 덜 작동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반면, 정당의 지지기반이 약할수록 경제투표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통상적으로 무당파보다는 지지정당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일수록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높은 집단, 즉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가 높은 집단이다.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경제문제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을 묻는 민주적 책임성기제에 따라 투표를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실제 미국선거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정치적 세련도와 경제투표 간 상관관계를 발견한 바(Fiorina 1981; Gomez and Wilson 2001; 2003; Goren 1997; Hetherington 1996; Mutz 1992), 이런 기존연구들의 논리를 한국에도 적용한다면, 지지정당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일수록 경제투표를 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3) 한국 무당파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한국의 무당파가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정치무관심층이 아니라고 본다. 무당파일수록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다는 경험적 근거에 바탕하여(류재성 2012; 박원호·송정민 2012; 이현출 2001; 정진민·길정아 2014) 무당파일수록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그만큼 기존 정당정치에 매우 비판적인 집단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 지지의 안정성과 경제투표 간 내생성(endogeneity)이다. 최근 다수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집권당의 경제실적에 대한 판단 자체가 유권자의 정당지지여부에 의해 선행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Anderson et al. 2004; Evans and Anderson 2006; Evans and Pickup 2010; Wilcox and Wlezien 1993; Wlezien et al. 1997). 즉, 집권당 지지자의 경우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집권당의 경제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런 주관적인 평가는 집권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심리적 근거로 작동한다. 야당 지지자의 경우 역시 객관적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집권당의 경제성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집권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경제에 대한 평가가 집권당 지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된 집권당에 대한 지지성향이 경제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음 선거의 주요 투표결정요인이 되는 논리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지정당이 분명한 유권자가 경제적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유지하는 것인지 혹은 지지여부에 의해 내생적으로 경제에 대한 평가가 형성되는 것인지는 별도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근거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동메커니즘이 무엇인가와는 별개로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동일한데, 지지정당이 분명한 유권자일수록 경제투표를 덜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종합하면, 경제투표의 작동은 개별 유권자의 정당지지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 관계의 방향은 정반대의 두 가지 가설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인 **정당지지에 따른 경제투표 제약 가설**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일수록 집권당의 경제실적을 바탕으로 투표할 확률이 높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집권당의 경제실적과 무관하게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대로 두 번째 가설인 **정당지지에 따른 경제투표 강화가설**은 정당지지와 경제투표 간의 양의 상관관계, 즉,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경제문제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기제에 따라 투표할 확률이 높고, 무당파일수록 그렇지 않은 확률이 높을

라고 본다(김성연 2015; 윤종빈 외 2016).

것이라고 기대한다.

2.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경제투표를 더 할 것인가?

한국은 후발산업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각종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로 인해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실업률과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적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는 경제투표를 가능하게 할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황아란(2000)의 연구는 IMF 경제위기 직후의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위기를 초래한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회고적 경제투표를 발견했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 이후 경제문제가 핵심쟁점이라 될 것이라는 김영태(2007)의 합리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에서 경제위기에 기반한 경제투표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경제 위기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투표현상이 강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가설은 경제구조변화가 개별 유권자에게 미치는 상이한 효과이다. 높은 실업률과 소득불평등 등 최근 한국 경제의 문제들이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등한 타격을 준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 비숙련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해고나 장기실업, 고용불안정, 가계소득저하 등의 경제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런 경제적 변화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책적,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권혁용(Kwon 2008)의 연구에서 보듯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된 실업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더 중요한 문제(salient issue)로 작동하였고,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저소득층일수록 우파정당에서 좌파정당으로 대통령 선거의 지지후보를 바꿀 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집권당의 경제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제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설

화할 수 있다(*경제적 취약계층 가설*).

3. 한국정치의 특수성인 지역주의나 세대갈등이 경제투표의 작동을 제한하는 것인가?

한국정치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투표이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할 수 없다. 한국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역주의이다. 한국의 경제투표를 연구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경제투표보다는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이현우 1998; 정한울·권혁용 2009; Kang 2013). 집권당 지지기반 지역의 유권자들은 집권당의 경제실책과 무관하게 집권당을 지지했고, 야당 지지기반 지역의 유권자들 역시 집권당의 경제실적과 무관하게 야당을 지지해왔다.

이런 투표행태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지역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에서 경제투표가 뚜렷이 관찰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실제 이현우(1998)의 연구는 지역주의가 약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후보자의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투표 결정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주의에 관한 가설은 이현우(1998)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제투표가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지역주의 가설*).

두 번째로 고려할 요소는 세대문제이다. 최근 세대갈등에 대한 분석이 증가하고 있는데(윤성이·이민규 2014;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갈등의 원인이나 양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점은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명백히 구분되는 정책선호와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대갈등은 경제투표와 어떻게 연관될까? 경제투표현상의 세대 간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재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은 현재의 세대갈등을 세대 간 서로 다른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본다(김영순·노정호 2017; 박길성 2011; 이상록·김형관 2013; 전영수 2013). 주로 복지정책이나 연금정책, 실업정책 등 정책의 수혜자와 부담자가 세대를 축으로 해서 나뉘는 정책이슈를 두고 소위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이 세대갈등으로 진화된다고 보는 관점이다(박길성 2011; 전영수 2013).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다면, 복지정책이나 연금정책의 혜택이 노년세대에게 집중된다고 생각하는 청년세대일수록 집권당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회고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세대갈등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정책 선호 차이가 아니라 좌우 이념 갈등과 중첩되어 생기는 갈등, 즉,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박재홍 2010; 윤성이·이민규 2014; 전상진 2018). 경제투표의 세대 간 차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연구는 윤성이와 이민규(2014)의 분석인데, 이들은 세대별로 주관적 이념성향 결정요인이 다름을 발견하였다. 통상적으로 한국인의 이념성향 결정요인은 대북관과 통일관 등 안보문제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정설이며, 윤성이와 이민규의 분석에서도 50세 이상 장년세대의 경우는 통상적 정설처럼 대북정책과 출신지역이 주관적 이념성향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이었다. 그런데 20-30대 청년세대에게 대북정책이나 영남 혹은 호남 출신 지역여부는 이념을 형성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고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가 주관적 이념성향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수였다.

이 연구의 함의를 수용한다면, 청년세대는 좌우대립의 냉전이데올로기나 지역주의적 갈등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소득분배와 경제성장문제를 중심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세대갈등가설**은 청년세대일수록 경제투표를 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III. 경험 분석

1. 자료와 측정

위의 가설들을 검증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 중 투표행태를 물어본 연도의 조사를 사용했다.⁴⁾ 한국종합사회조사는 국가전체 경제상황과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과 선거에서의 투표선택도 묻고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적절한 자료이다. 또한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이 특정한 한 개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투표가 다수의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투표결정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것이므로 2002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을 묻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누적자료가 가장 적절한 자료이다.

경제투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의 경제실적에 대한 평가가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삼는가(sociotropic), 혹은 개인의 가계경제를 기준으로

4) 2007년과 2008년에는 조사년도에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참여여부만 묻고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이 없었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2007년 대선 당시 투표를 회고하여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지만, 2008년 총선의 경우는 없었다. 이런 한계로 인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 중 실제 자료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연도와 해당 선거는 2004년 총선의 지역구선거에 대한 2004년도 설문조사, 2007년 대선에 대한 2010년도와 2016년도 설문조사,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2010년도 조사, 2012년 대선에 대한 2013년도와 2016년도 조사,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2014년도 조사, 그리고 2016년 총선의 지역구선거에 대한 2016년도 조사이다. 이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선거 당 해의 설문조사와 선거가 없는 년의 설문조사는 정치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분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본 연구의 연구질문이 경제투표의 장기적 작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 지적과 같은 한계를 감안하고서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누적자료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오류는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s)를 통해 통계적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삼는가(pocketbook)를 구분하며, 평가의 시점이 회고적(retrospective)인지 혹은 전망적(prospective)인지를 구분한다. 서구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회고적 경제투표를 더 많이 확인한 반면, 한국사례연구들은 주로 전망적 경제투표경향을 더 많이 발견하였다(강우진 2013; 문우진 2018; 이내영·안종기 2013; 이재철 2008; 황아란 2000).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sociotropic retrospective voting)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고, 가계부적 회고투표(pocketbook retrospective voting)는 본인 가족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sociotropic prospective voting)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가계부적 전망투표(pocketbook prospective voting)는 본인 가족의 10년 이내 경제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네 문항 모두 긍정적인 판단이 높은 값을 갖도록 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네 가지 문항들이 매년 다 조사되었던 것은 아닌데,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는 2009년, 2010년,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사되었고, 가계부적 회고투표는 2007년, 2013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사되었고,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는 2016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조사되었고 가계부적 전망투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되었다.

종속변수인 집권당투표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통령선거, 2014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각 집권당의 후보를 지지한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한 더미변수로 측정했다.

기본적인 통제변수로써 인구경제학적 특징이 모든 모델에 포함되었다. 성별은 여성을 1로 한 더미변수이고, 연령은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각 세대별로 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지역주의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영남과 호남지역 거주자를 각각의 더미변수로 측정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 고졸이 2, 대졸이

3, 대졸 이상이 4로 측정된 4점 척도이다.

집권당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통제변수 중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제상황이다. 경제투표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투표행위인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유권자의 소득이나 고용상태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월평균 가계소득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0원 이상에서 150만원 이하를 1로, 15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하를 2로, 300만원 이상에서 450만원 이하를 3으로, 45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이하를 4로, 600만원 이상을 5로 할당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고용상태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어떤 형태로든 현재 직업을 가진 응답자를 1로 한 더미변수로 측정했다.

최근 일부 연구들이 객관적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계층적 자기이해(self-interest)를 설명하는 더 유의미한 지표라고 주장하는데(박선경 2017; 장승진 2013), 경제투표 역시 ‘객관적 소득’ 자체보다는 유권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른 투표행위이므로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소득보다 더 유용한 지표일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수용하여 소득위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변수를 소득에 대한 대리(proxy)로 사용한 모델도 분석해보았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을 경제투표의 통제변수로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정파성과 투표선택 간의 강한 다중공선성 때문에 모델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김영순·노정호 2017), 오히려 경제성과에 대한 인식, 이념, 그리고 투표 간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념이나 정파성에 대한 지표를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이현우 1998; 정한울·권혁용 2009). 이념은 스스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냐고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여, 매우 진보와 다소 진보를 진보이념성향자로, 다소 보수와 매우 보수를 보수이념성향자로 각각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정당지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용하여 크게 보수당지지자, 민

주당지지자, 진보정당지지자를 각각의 더미변수로 측정했다.⁵⁾

경제투표의 원리는 국가나 개인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권당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나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관점 등 다양한 국가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신뢰와 정부의 책임정도에 대한 의견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정부신뢰는 청와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묻은 문항을 사용하여, 숫자가 높을수록 더 신뢰함을 의미하는 3점 척도로 측정했다. 청와대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청와대,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정부, 국회, 대법원과 군대)에 대한 신뢰를 합친 변수로도 정부신뢰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정도는 복지나 각종 사회이슈에서 정부가 얼마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이 문항은 좁게 보면 복지선호를 측정하는 문항이지만 넓게 보면 국가의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변수이다. 정부의 책임정도는 다음의 분야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되었는데, 문항마다 답변의 척도가 달라서 개별 문항에 대한 답변을 z값으로 표준화시킨 후 합한 평균값으로 측정했다. 정부의 책임

5)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보수정당으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개혁국민정당, 국민통합21이 민주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었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보수정당으로,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보수정당으로, 중도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보수정당으로,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민주당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연대회의가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미래희망연대가 보수정당으로, 민주당,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선진통일당, 국민생각이 보수정당으로, 민주통합당과 전통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진보당으로 분류되었다. 2013년에는 새누리당이 보수당으로,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진보당으로 분류되었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이 보수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으로,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진보당으로 분류되었다. 2016년에는 새누리당이 보수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정의당이 진보당으로 분류되었다.

분야로는 육아서비스제공, 노인생활수준 유지, 복지, 일자리 제공, 물가안정, 보건 의료, 성장에 필요한 산업 지원, 실업자 지원, 빈부격차 완화,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무주택자 주거지원, 그리고 환경피해 감소 위한 법적 규제가 설문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되는 여론조사가 매년 다른 시기의 여론조사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변하는 객관적인 국가경제상황이 경제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년도 1인당 실질 GDP 연간성장률을 포함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1인당 실질 GDP 연간성장률 대신 연도별 더미변수를 넣어 연도고정효과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연도별 더미변수없이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결과는 동일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기술통계

변수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	1667	2.705459	1.067466	1	5
가계부적 회고투표	1667	2.922016	1.093982	1	5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	1667	3.370126	0.966619	1	5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	1667	3.407918	0.933766	1	5
가계소득	1667	2.881824	1.415851	1	5
고용상태	1667	0.611278	0.487606	0	1
연령	1667	3.412717	1.338337	1	5
학력	1667	2.431314	1.16648	1	4
성별(여성=1)	1667	0.507499	0.500094	0	1
영남지역거주자	1667	0.29934	0.458106	0	1
호남지역거주자	1667	0.131374	0.33791	0	1
진보이념성향	1667	0.356929	0.479237	0	1
보수이념성향	1667	0.357529	0.479416	0	1
진보정당지지자	1667	0.287942	0.45294	0	1
보수정당지지자	1667	0.421116	0.493886	0	1
주관적소득위치	1667	2.643071	0.972191	1	5
정부책임	1667	-0.00754	1.171744	-5.29133	2.519497
전년도1인당실질 GDP연간성장률(%)	1667	4.695328	1.421406	3.282	6.124

2. 통계분석

경제투표이론의 한국적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논의되었던 가설은 정당지지 제약 가설, 경제적 취약계층 가설, 지역주의 가설, 그리고 세대갈등가설이었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전에 우선 경제투표의 기본적 형태를 알기 위해 <표 2>와 같이 경제투표를 측정하는 네 가지 문항만을 넣은 모델을 분석했다. 모델 1은 인구경제학적 변수들만 통제변수로 포함된 모델이고, 모델 2는 이념성향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모델이다. 모델 3은 주관적 소득위치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정도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모델이며, 모델 4는 앞의 세 모델들이 사용한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이다.

모델 4를 제외한다면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와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보이지만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델 4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져서 한국의 선거에서 경제투표가 안정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의 결과를 한국 경제투표의 기본적 형태로 간주하고, 앞서 논의한 가설들을 차례대로 확인해보도록 하자.

〈표 2〉 경제투표 기본 모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사회공동체적	0.231 ^{***}	0.174 [*]	0.196 ^{**}	0.150
회고투표	(0.059)	(0.083)	(0.061)	(0.087)
가계부적 회고투표	0.015	0.002	0.015	0.009
	(0.055)	(0.073)	(0.063)	(0.084)
사회공동체적	0.142 [*]	0.107	0.137 [*]	0.104
전망투표	(0.062)	(0.089)	(0.065)	(0.090)
가계부적 전망투표	-0.082	-0.142	-0.058	-0.145
	(0.063)	(0.081)	(0.065)	(0.085)
가계소득	0.029	0.002	0.015	0.002
	(0.049)	(0.074)	(0.054)	(0.084)
고용상태	-0.300 [*]	-0.065	-0.260 [*]	-0.044
	(0.122)	(0.180)	(0.126)	(0.186)
연령	0.466 ^{***}	0.249 ^{**}	0.492 ^{***}	0.256 ^{**}
	(0.053)	(0.077)	(0.056)	(0.080)
학력	0.051	0.087	0.068	0.092
	(0.063)	(0.093)	(0.067)	(0.101)
성별(여성=1)	-0.005	0.227	0.048	0.200
	(0.118)	(0.171)	(0.122)	(0.177)
영남거주자	0.800 ^{***}	0.639 ^{***}	0.791	0.661
	(0.123)	(0.176)	(0.127) ^{***}	(0.181) ^{***}
호남거주자	-2.567 ^{***}	-1.323 ^{***}	-2.558 ^{***}	-1.257 ^{**}
	(0.270) ^{***}	(0.385) ^{***}	(0.276)	(0.388)
전년도 성장률	-0.017	0.079	-0.017	0.072
	(0.040)	(0.057)	(0.042)	(0.059)
진보이념		-0.575 [*]		-0.608 ^{***}
		(0.186)		(0.192)
보수이념		0.809 ^{***}		0.803 ^{***}
		(0.195)		(0.198)
민주당 지지자		-1.764 ^{***}		-1.742 ^{***}
		(0.230)		(0.235)
보수당 지지자		2.846 ^{***}		2.790 ^{**}
		(0.181)		(0.187)
정부신뢰			-0.555 ^{***}	-0.398 [*]
			(0.115)	(0.164)
주관적소득위치			-0.075	-0.077
			(0.078)	(0.111)
정부의 책임정도			-0.219 ^{***}	-0.207 ^{**}
			(0.049)	(0.073)
상수	-2.453 ^{***}	-2.750 ^{***}	-0.969	-1.488
	(0.464)	(0.714)	(0.572)	(0.872)
로그우도	-981.66	-550.99	-923.45	-525.49
사례수	1,730	1,677	1,672	1,632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is. * p<0.05; ** p<0.01; *** p<0.001

〈표 3〉 정당일체감 제약 가설: 경제투표와 무당파 간 상호작용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사회공동체적 회고*무당파	-0.426** (0.141)	-0.452** (0.149)	-0.521*** (0.145)	-0.548*** (0.157)
사회공동체적 회고	0.298*** (0.068)	0.345*** (0.071)	0.281*** (0.069)	0.331*** (0.073)
가계부적 회고*무당파	0.168 (0.129)	0.211 (0.135)	0.216 (0.136)	0.250 (0.145)
가계부적 회고투표	-0.011 (0.065)	0.013 (0.067)	-0.019 (0.071)	0.013 (0.073)
사회공동체적 전망*무당파	0.437** (0.151)	0.499** (0.163)	0.466** (0.158)	0.537** (0.175)
사회공동체적 전망	0.041 (0.070)	-0.007 (0.075)	0.031 (0.073)	-0.005 (0.079)
가계부적 전망*무당파	0.157 (0.150)	0.165 (0.162)	0.190 (0.165)	0.146 (0.176)
가계부적 전망투표	-0.081 (0.072)	-0.074 (0.077)	-0.057 (0.073)	-0.041 (0.078)
무당파	-1.911* (0.787)	-2.220* (0.865)	-2.020* (0.862)	-2.145* (0.939)
가계소득	0.027 (0.049)	-0.008 (0.053)	0.016 (0.054)	-0.011 (0.059)
고용상태	-0.294* (0.125)	-0.259 (0.134)	-0.256* (0.129)	-0.231 (0.138)
연령	0.477*** (0.054)	0.435*** (0.058)	0.504*** (0.056)	0.457*** (0.060)
학력	0.065 (0.064)	0.091 (0.069)	0.079 (0.067)	0.098 (0.073)
성별(여성=1)	0.042 (0.120)	0.054 (0.128)	0.094 (0.125)	0.104 (0.133)
영남거주자	0.814*** (0.126)	0.799*** (0.135)	0.804*** (0.130)	0.796*** (0.139)
호남거주자	-2.616*** (0.280)	-2.702*** (0.298)	-2.642*** (0.289)	-2.719*** (0.309)

전년도 성장률	-0.004 (0.041)	0.012 (0.044)	-0.002 (0.042)	0.006 (0.045)
진보이념		-0.628*** (0.146)		-0.620*** (0.151)
보수이념		0.999*** (0.150)		1.007*** (0.155)
주관적소득위치			-0.080 (0.080)	-0.094 (0.085)
정부신뢰			-0.529*** (0.119)	-0.550*** (0.127)
정부의정책책임			-0.223*** (0.049)	-0.243*** (0.053)
상수	-2.247*** (0.489)	-2.329*** (0.533)	-0.846 (0.599)	-0.901 (0.657)
로그우도	-946.91	-851.54	-889.38	-800.81
사례수	1,699	1,652	1,644	1,608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is.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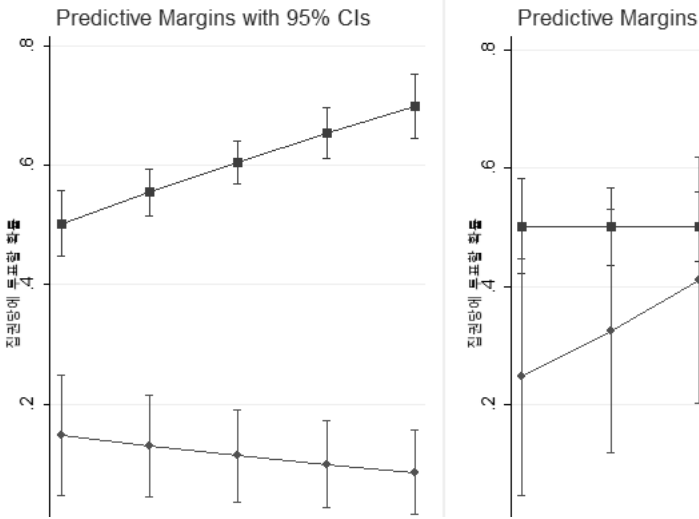
우선, 정당지지 제약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응답자들과 지지정당이 있는 응답자들을 구분하여 이들 간 경제투표양상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런 조건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 3에서 간단한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확인했다. 즉, 경제투표 행태를 측정한 네 가지 변수들과 무당파 더미 변수를 각각 곱한 교차항(interaction terms)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 무당파 더미변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1로, 지지정당을 밝힌 사람을 0으로 코딩한 변수이다.

모델 1과 모델 4의 결과에서 보듯이, 첫 번째 줄의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의 상호작용변수와 다섯 번째 줄의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의 상호작용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무당파와 지지정당이 있는 사람 간의 경제투표 여부가 유의미하게 다를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투표가 개인의 경제상

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에 기반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무당파 중에서 지금까지의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에 만족했을수록 집권당에게 투표할 확률이 낮았고, 무당파 중에서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집권당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상호작용변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두 상호작용 변수의 효과를 그래프로 구현했다.⁶⁾ <그림 1>의 왼쪽 그래프는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이며, 두 그래프 모두 지지정당이 있는 응답자들과 무당파들이 각각 집권당에 투표할 확률의 한계(margins)을 계산한 결과이다. 왼쪽 그래프는 지지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파란 색 사각형선)이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집권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고, 무당파(붉은 색 원형선)들이 국가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집권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즉, 지지정당이 있는 응답자들이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를 하였고 무당파는 오히려 경제투표의 매커니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투표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가설 중 정당지지에 따른 경제투표강화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6) <표 3>의 모델 4의 결과로 예측한계를 계산했다. 상호작용효과의 해석을 그래프로 표현해야 하는 이론적 이유는 브람버 외(Brambor et al. 2006)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림 1은 Stata 통계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호작용효과와 예측한계(predictive margins)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https://www.stata.com/stata-news/news31-3/spotlight/> 검색일: 2019년 3월 31일)를 참고하여 그렸다.



〈그림 1〉 정당지지에 따른 경제투표현상의 예측한계

오른쪽 그래프는 지지정당이 있는 응답자들의 집권당 투표 확률이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무당파들의 경우 앞으로의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집권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는 오히려 무당파에서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제투표행위가 모든 유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정당의 유무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경제실적에 대한 판단기준 시점 역시 회고적일지 전망적일지도 지지정당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표 4>는 경제적 취약계층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1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와 네 가지 유형의 경제투표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모델 결과이다. 네 가지 모델 모두 경제적 취약계층들의 경제투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주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영남거주자와 호남거주자를 제외한 지역의 응답자들과 네 가지 경제투표지표를 곱한 상호작용모델을 분석했고, 그 결

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과 호남거주자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표 2>의 경제투표 기본모델처럼,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다. 즉, 지역주의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들만을 분석한다고 해도 경제투표의 양상을 뚜렷하게 발견하기 힘들다.

<표 4> 경제적 취약계층 가설: 경제투표와 경제적 취약계층 간 상호작용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사회공동체적 회고*취약층	0.102 (0.120)	0.153 (0.165)	0.093 (0.122)	0.172 (0.173)
사회공동체적 회고	0.177 (0.092)	0.091 (0.121)	0.144 (0.095)	0.056 (0.129)
가계부적 회고*취약층	-0.052 (0.110)	-0.185 (0.145)	-0.041 (0.113)	-0.160 (0.150)
가계부적 회고투표	0.044 (0.086)	0.092 (0.109)	0.037 (0.092)	0.076 (0.118)
사회공동체적 전망*취약층	-0.205 (0.123)	-0.127 (0.171)	-0.166 (0.127)	-0.124 (0.174)
사회공동체적 전망	0.251** (0.093)	0.171 (0.116)	0.227* (0.096)	0.172 (0.121)
가계부적 전망*취약층	0.043 (0.125)	0.222 (0.158)	0.065 (0.129)	0.265 (0.165)
가계부적 전망투표	-0.106 (0.095)	-0.256* (0.115)	-0.095 (0.097)	-0.283* (0.121)
무당파	0.352 (0.606)	-0.089 (0.854)	0.216 (0.637)	-0.271 (0.876)
상수	-2.586*** (0.643)	-2.773** (0.885)	-1.104 (0.737)	-1.493 (0.999)
로그우도	-980.04	-549.14	-922.41	-523.30
사례수	1,730	1,677	1,672	1,632

<표 2>의 기본모델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들(소득, 고용상태, 연령, 학력, 성별, 영호남지역거주자, 전년도성장률, 이념, 지지정당, 정부신뢰, 주관적소득위치, 정부책임정도)은 모두 로짓분석에 포함되었으나, 분량의 제약 때문에 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is. * p<0.05; ** p<0.01; *** p<0.001

<표 5> 지역주의 가설: 경제투표와 지역주의 간 상호작용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사회공동체적 회고*비영호남	0.115 (0.107)	0.133 (0.163)	0.149 (0.110)	0.164 (0.170)
사회공동체적 회고	0.162* (0.078)	0.091 (0.123)	0.103 (0.081)	0.044 (0.129)
가계부적 회고*비영호남	0.039 (0.100)	-0.164 (0.147)	0.034 (0.104)	-0.159 (0.152)
가계부적 회고투표	-0.013 (0.076)	0.088 (0.114)	-0.009 (0.081)	0.085 (0.120)
사회공동체적 전망*비영호남	0.098 (0.116)	0.124 (0.169)	0.050 (0.121)	0.072 (0.174)
사회공동체적 전망	0.036 (0.088)	0.020 (0.130)	0.065 (0.093)	0.050 (0.135)
가계부적 전망*비영호남	0.047 (0.116)	0.086 (0.158)	0.070 (0.121)	0.077 (0.165)
가계부적 전망투표	-0.172 (0.089)	-0.234 (0.124)	-0.162 (0.094)	-0.229 (0.130)
비영호남 지역민 더미	-0.903 (0.527)	-0.780 (0.802)	-0.882 (0.555)	-0.702 (0.830)
상수	-1.417** (0.508)	-1.988* (0.809)	-0.115 (0.614)	-0.849 (0.969)
로그우도	-1,114.15	-570.77	-1,047.58	-544.06
사례수	1,730	1,677	1,672	1,632

<표 2>의 기본모델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들(소득, 고용상태, 연령, 학력, 성별, 영호남지역 거주자, 전년도성장률, 이념, 지지정당, 정부신뢰, 주관적소득위치, 정부책임정도)은 모두 로짓분석에 포함되었으나, 분량의 제약 때문에 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is. * p<0.05; ** p<0.01; *** p<0.001

마지막으로 세대갈등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20-30대만을 1로, 나머지 연령집단을 0으로 코딩한 청년층 더미변수와 경제투표지표를 곁한 상호작용모델을 분석했다. <표 6>의 모델 4에서 보듯이 사회경제적 회고투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는 모델 4의 상호작용변수에 대한 예측마진을 그린 그림이다. 4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는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집권당 투표확률이 변하지 않아서 사회경제적 회고투표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인 반면, 20-30대 청년층의 경우, 국가의 경제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집권당에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본문 안에 표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세대군을 분리해서 경제투표여부를 확인해보기도 했다. 세대 간 경제투표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세대갈등가설은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갈등을 전제하는 반면, <표 6>의 상호작용효과는 20-30대 청년층과 4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집단 간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40대 중년층이 대조군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의 경제투표 기본 모델을 20-30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확인해보고, 50세 이상 장년층만을 대상으로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응답군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도 <표 6>과 동일했다. 20-30대 청년층들만을 분석했을 때 국가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집권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50세 이상 장년층은 네 가지 종류 중 어떤 방식의 경제투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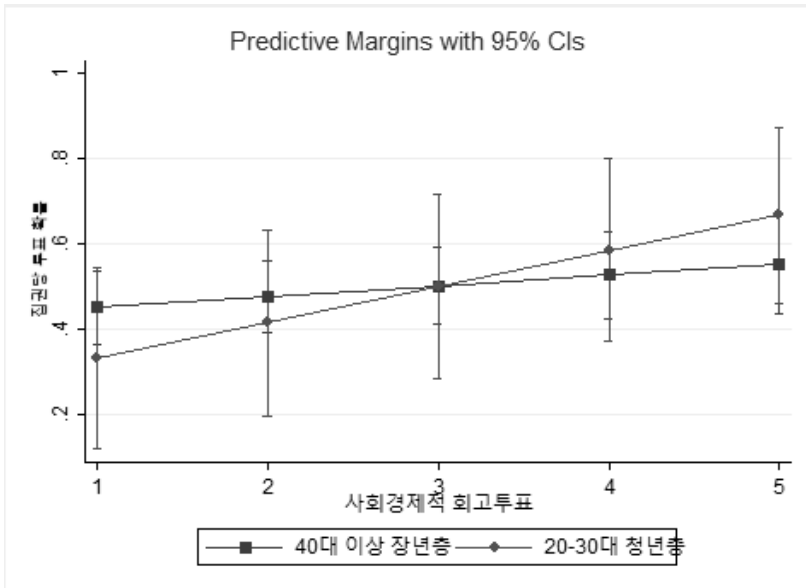
<표 6> 세대갈등가설: 경제투표와 세대 간 상호작용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사회공동체적 회고*청년층	0.238 (0.132)	0.428* (0.194)	0.251 (0.135)	0.467* (0.199)
사회공동체적 회고	0.167* (0.070)	0.057 (0.097)	0.130 (0.072)	0.026 (0.103)
가계부적 회고*청년층	-0.052 (0.121)	-0.111 (0.158)	-0.038 (0.126)	-0.099 (0.162)
가계부적 회고투표	0.037 (0.065)	0.050 (0.086)	0.030 (0.073)	0.052 (0.098)
사회공동체적 전망*청년층	0.055 (0.136)	0.025 (0.193)	0.071 (0.142)	0.073 (0.198)

사회공동체적 전망	0.132 (0.074)	0.121 (0.108)	0.120 (0.077)	0.105 (0.111)
가계부적 전망*청년층	0.033 (0.152)	-0.073 (0.190)	0.027 (0.155)	-0.092 (0.194)
가계부적 전망투표	-0.097 (0.072)	-0.139 (0.095)	-0.073 (0.075)	-0.141 (0.100)
청년층 더미	-0.793 (0.770)	-1.040 (0.943)	-0.751 (0.811)	-1.181 (0.950)
가계소득	0.028 (0.050)	-0.027 (0.077)	0.021 (0.055)	-0.025 (0.087)
고용상태	-0.296* (0.124)	-0.091 (0.182)	-0.243 (0.128)	-0.061 (0.188)
연령	0.464*** (0.084)	0.125 (0.124)	0.536*** (0.088)	0.162 (0.128)
학력	0.054 (0.063)	0.107 (0.094)	0.070 (0.067)	0.110 (0.102)
성별(여성=1)	0.001 (0.119)	0.214 (0.174)	0.062 (0.123)	0.195 (0.179)
영남거주자	0.814*** (0.125)	0.648*** (0.175)	0.811*** (0.128)	0.675*** (0.180)
호남거주자	-2.549*** (0.268)	-1.332*** (0.387)	-2.545*** (0.275)	-1.270** (0.394)
전년도 성장률	-0.015 (0.040)	0.072 (0.058)	-0.015 (0.042)	0.064 (0.060)
진보이념		-0.587** (0.188)		-0.625** (0.194)
보수이념		0.830*** (0.198)		0.821*** (0.200)
민주당 지지자		-1.789*** (0.232)		-1.773*** (0.238)

보수당 지지자		2.852 ^{***}		2.794 ^{***}
		(0.182)		(0.188)
정부신뢰			-0.556 ^{***}	-0.390 [*]
			(0.116)	(0.165)
주관적소득위치			-0.071	-0.071
			(0.078)	(0.110)
정부의정책책임			-0.216 ^{***}	-0.202 ^{**}
			(0.049)	(0.071)
상수	-2.270 ^{***}	-2.005 [*]	-0.976	-0.834
	(0.566)	(0.831)	(0.648)	(0.968)
로그우도	-979.47	-547.07	-921.00	-521.48
사례수	1,730	1,677	1,672	1,632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is. * p<0.05; ** p<0.01; *** p<0.001



〈그림 2〉 세대에 따른 경제투표현상의 예측한계

IV. 결론

한국에서 왜 경제투표이론이 장기적이고 강하게 관찰되지 않는지를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교국가사례로서의 한국의 보편적 특징과 한국정치적 맥락에서의 특수성들을 감안하여 몇 가지 가설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를 활용한 경험 분석결과, 지지정당의 유무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따라 경제문제를 기준으로 집권당에 투표하는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의 가계경제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을 준거로 집권당을 평가했다. 지지정당이 있는 사람들과 20-30대 청년층들은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를, 무당파들은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를 했다. 반면, 경제적 취약성이나 지역주의 갈등 구조가 경제투표의 발현을 막을 것이라는 이론적 추론은 경험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는 본문에서 언급했던 내생성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당지지의 유무에 따라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가 달리 작동하는 것을 보면, 집권당의 경제실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당파성, 그리고 집권당에 대한 재지지 간의 내생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험자료의 부재로 인해 본 연구가 밝히지 못한 한국정치적 맥락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권위주의 시기에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와 빠른 경제성장의 유산이다. 권위주의 시기에 이룬 경제발전의 역사 때문에 한국정치에서는 권위주의 정당의 후신인 보수정당들이 경제적으로 더 유능한 집단이라는 인식 혹은 이미지가 있다. 이런 한국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이내영·안종기(2013)의 논문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전망적 투표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이런 권위주의 시기 경제성장의 유산을 확인할 정량자료를 찾아 이에 의한 경제투표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선거에서 경제투표가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비교사례적 맥락과 한국정치적 맥락에서 확인하고자 했다는 면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특정한 한 두 번의 선거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거를 분석했기 때문에 한국 선거에서 경제투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요 투표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13. “제 18대 대선과 경제투표.”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2호, 73-105.
- 김성연. 2015. “한국 무당파의 이념, 정책, 선호, 그리고 정치적 태도: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권 3호, 149-171.
- 김성연. 2016. “한국 선거에서 경제투표의 영향: 제18대 대통령 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정치학회보』 50권 5호, 109-130.
- 김영순·노정호. 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권 3호, 109-141.
- 김영태. 2007. “17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정치정보 연구』 10권 2호, 65-77.
- 김재한. 1993. “제14대 대선과 한국경제.” 『한국정치학회보』 27권 1호, 99-201.
- 문우진. 2018. “경제투표, 선거심판과 민주주의: 경제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평가와 전망이 여당후보 지지에 미치는 영향.” 『평화연구』 26권, 5-44.
- 류재성. 2012. “중도 및 무당파 유권자 특성: 무태도(non-attitudes)인가 부정적 태도(negativity)인가?” 『대한정치학회보』 20권 1호, 101-128.
- 박경산.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27권 1호, 185-208.
-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권 1호, 3-23.
- 박선경. 2017. “자신의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과 재분배 선호.” 『한국정당학회보』 16권 1호, 71-100.
- 박원호·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 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권 2호, 115-144.
- 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 이념, 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권, 75-99.
- 송진미·박원호. 2014.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한국정당학회보』 13권 1호, 5-31.
- 이현출. 2001. “무당파의 투표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권 3호, 137-160.

- 윤성이 · 이민규. 201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주관적 이념 결정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권 3호, 271-292.
- 윤종빈 · 김진주 · 정희욱. 2016. “한국 무당파의 특성과 투표행태 분석: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7권 2호, 83-109.
- 이내영 · 안종기.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회고적 투표: 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12권 2호, 5-36.
- 이내영 · 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40권, 37-83.
- 이상록 · 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 433-458.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11-136.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푸른길.
- 장승진. 2013.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7권, 51-70.
- 전상진. 2018. 『세대게임』 서울:문학과지성사.
- 전영수. 2013. 『세대전쟁』 서울:이인시각.
- 정진민 · 길정아. 2014.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 인지적 동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권 3호, 135-162.
- 정한울 · 권혁용. 2009.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 투표.” 김민진 ·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3』 서울:동아시아연구원.
- 황아란. 2000. “경제투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34권 2호, 193-212.
- Anderson, Christopher, Silvia Mendes, and Yuliya Tverdova. 2004. “Endogenous Economic Voting: Evidence from the 1997 British Election.” *Electoral Studies* 23, No. 4, 683-708.

- Duch, Raymond. 2008. *The Economic Vote: How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Condition Election Resul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 Geoffrey and Robert Andersen. 2006.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Journal of Politics* 68, No. 1, 194-207.
- Evans, Geoffrey and Mark Pickup. 2010. "Reversing the Causal Arrow: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in the 2000-2004 U.S. Presidential Election Cycle." *Journal of Politics* 72, No. 4, 1236-1251.
- Fiorina, Morris.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omez, Brad T., and Matthew Wilson. 2001.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Economic Voting in the American Electorate: A Theory of Heterogeneous Attribu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No. 4, 899-914.
- Gomez, Brad T., and Matthew Wilson. 2003. "Causal Attribution and Economic Voting in American Congression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 No. 3, 271-282.
- Goren, Paul. 1997. "Political Expertise and Issue Voting in Presidenti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 No. 2, 387-412.
- Hetherington, Marc. 1996. "The Media's Role in Forming Voters' National Economic Evaluations in 199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 No. 2, 372-395.
- Kang, WooJin. 2013. "Regional Party System, Causal Attribution, and Economic Voting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the 200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4, No. 2, 173-190.
- Kwon, Hyeok Yong. 2008. "A Dynamic Analysis of Partisan Voting: The Issue Salience Effect of Unemployment in South Korea." *Electoral Studies* 27, No. 3, 518-532.

-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7. "Economic Model of Voting." Dalton, Russell and Hans-Dieter Klinge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8. "The Economic Vote in Transitional Democracies."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18, No. 3, 303-323.
- Mutz, Diana. 1992. "Mass Media and the Depoliticization of Personal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No. 3, 483-508.
- Tufte, Edward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cox, Nathaniel and Christopher Wlezien. 1993. "The Contamination of Responses to Survey Items: Economic Perceptions and Political Judgements." *Political Analysis* 5, No. 1, 181-213.
- Wlezien, Christopher, Mark Franklin and Daniel Twiggs. 1997. "Economic Perceptions and Vote Choice: Disentangling the Endogeneity." *Political Behavior* 19, No. 1, 7-17.

투고일: 2019.02.15. 심사일: 2019.03.29. 게재확정일: 2019.04.12.

How to Apply Economic Voting Theory in Korean Elections

Park, Sunkyoung | Kookmin University

Studies in Korean elections argue whether economic voting theories work and most of them fail to find strong and stable economic voting patterns. To find out why economic voting theories do not work in Korean elections, this study poses several hypotheses such as the weak support base of party politics hypothesis, the economic insecure hypothesis, regionalism hypothesis, and generation conflict hypotheses. Empirical evidences from the cumulative survey wave of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support the weak party base hypothesis and generation difference hypothesis.

Key Words | economic voting, sociotropic retrospective voting, sociotropic prospective voting, Korean politics, the independents, generational difference